

## 남북협력공사 설립문제에 대한 정부입장

2005. 11. 10(목)

통일부 교류협력국 교류협력총괄과 김창현 서기관

최근 남북협력공사 설립문제를 놓고 여러 가지 보도들이 나오고 있다. 한반도 정세가 급변하고 있고 남북관계가 획기적으로 발전하고 있는 시점에서 「공사」 설립문제에 대한 언론의 관심은 당연한 것처럼 보인다.

하지만 일부 보도내용에서 본말이 전도된 채 공사의 성격과 취지가 호도되고 있는 것은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다.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실무자로서 보도내용에서 드러난 몇가지 오해를 바로잡고자 한다.

**우선 정부가 「남북협력공사」 설립문제를 검토하게 된 배경부터 살펴볼 필요가 있다.**

금년들어 남북간 교류협력은 새로운 전기를 맞이하였다. 교류협력의 규모가 확대되고 분야가 다양화되는 등 양과 질적인 면에서 그야말로 큰 진전을 이루고 있다.

이러한 사실은 몇가지 주요통계에서도 확연히 드러난다.

남북왕래 인원을 살펴보자. 분단이후 2004년까지 50여년동안 85,400명이었다. 금년에는 9월까지 이미 68,000여명을 넘어섰고, 연말까지 85,000명에 이를 전망이다. 지난 50년 동안의 왕래인원과 올 한해의 왕래인원이 거의 같은 수준이다.

남북간 교역액은 그동안 꾸준히 늘어 금년에는 드디어 10억달러 시대에 들어서게 되었다. 90년대 1억달러 돌파에 의미를 두었던 시절을 떠올리면 세상이 달라진 셈이다.

대북투자 규모도 올들어 9월까지 4,700만달러에 달하고 있다. 1988년 이후 2004년까지 17년동안의 총액이 5,500만달러였던 것을 감안하면 가히 폭발적인 신장세다.

상황이 바뀌면서 남북교류협력 추진방식을 둘러싸고 새로운 주장이 제기되었다.

‘대규모 대북협력사업에 정부가 전면에서 나서지는 것은 부적절하다.’, ‘기업성과 공공성을 동시에 갖춘 남북경협 전담기구를 설치해야 한다.’는 주장이 그것이다. 사실 이러한 주장이 처음은 아니었다. 그동안 남북관계 전문가들 사이에 꾸준히 제기되어 왔으나, 금년들어 폭넓게 세를 얻게 된 것이다.

공사의 필요성이 공론화된 것은 지난 10월 국정감사 기간이었다. 국회의원들은 반관반민 형태의 남북경협공사가 필요함을 역설하였다. 특히 현대의 비자금문제가 불거지면서 「공사」는 남북협력기금의 투명성을 확보하는 유력한 대안으로 제시되기도 하였다.

금년들어 남북협력사업이 농업·수산업·광업·경공업 분야로 확대되는 등 다양화·전문화되는 추세가 확인해지면서, 집행업무를 전담할 수 있는 공사의 필요성이 절실하게 다가왔다.

더욱이 남북협력사업이 SOC협력, 산업협력 등으로 확대될 경우에 지금처럼 중앙부서에서 정책업무와 집행업무를 함께 담당한다는 것은 효율적이지도 않거니와 물리적으로도 불가능할 것이다.

정부가 남북협력공사 설립을 검토하게 된 것은 바로 이러한 배경에서 시작되었다.

정부가 남북협력공사 설립을 검토하면서 대북정책의 장기적 목표를 고려했던 것도 사실이다.

우리의 대북정책 목표는 남북경협을 통한 남북경제의 균형적 발전과 경제공동체 형성, 한반도의 긴장완화와 평화정착, 우리 중소기업의 활로 모색, 대륙으로 가는 물류 개척 등 남북간의 평화와 공동번영을 이룩하는 데 있다.

이러한 비전은 개성공단 개발과정에서 구체화되고 있다. 적어도 이러한 대북정책의 큰 흐름에는 국민적 합의가 이루어졌다고 보아도 무리가 없을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남북간 경협이 당국간의 공적 협력 위주에서 벗어나 민간 위주로 추진되는 것이 올바른 접근방식이다. 그러나 현재의 남북관계 현실을 감안할 때, 민간이 전담하기에는 어려운 점이 있다. 당국과 민간의 중간영역에서 기업 경영방식에 따라 경협사업을 추진할 반관반민 성격의 「공사」가 필요한 것은 바로 이러한 이유 때문이다.

당분간 남북경협은 정부와 민간, 그리고 반관반민 공사가 적절한 역할 분담을 통해 효율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해야 한다. 정부는 남북협력 공사가 말로 바로 그러한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현재까지 남북협력공사가 필요하다는 정부입장에는 변함이 없다. 다만 지금 당장 추진하기 보다는 단계적으로 신중하게 접근한다는 게 정부 구상이다. 일단 행정조직으로 운영하다가 이를 모태로 적절한 시기에 「남북협력공사」를 발족하겠다는 생각이다.

마지막으로 남북협력공사가 유관부처의 반대로 핵문제 해결이 가시화할 시점까지 보류되었다”는 보도는 잘못된 것임을 지적하고자 한다.

최근까지 남북협력공사 설립문제를 검토하면서 정부내 관련부처들 간에 초보적인 의견교환이 있었다. 그 과정에서 공사 설립 필요성에 대해서는 대체로 공감대를 이루었으나, 일부 「신중론」이 제기되었던 것은 사실이다.

「신중론」의 핵심은 현재 남북경협 규모에 비해 공사 설립은 다소 빠른 감이 있고, 공사설립에는 준비과정이 필요한 만큼 신중하게 접근하자는 것이었다. 다시 말해 지금 진행되고 있는 남북경협의 확대와 발전을 좀더 지켜보자는 입장이었다.

공사 설립을 둘러싸고 부처간에 다양한 의견이 제기될 수 있다. 통일부는 관련부처들이 제기한 의견들을 적극적으로 수렴해서 보완해 나갈 방침이다.

공사 설립을 검토하면서 핵문제는 고려 대상이 아니었다. 사실 「남북협력공사」는 그 성격상 북핵문제와 연계할 문제는 아니며, 북핵문제가 6자회담 틀내에서 논의되고 있는 상황에서 연계할 수도 없는 문제라고 할 수 있다.

북한은 우리가 어쩔 수 없이 함께 가야할 공동운명체이자, 우리 경제가 개척해 나갈 기회 땅(통로)이기도 하다.

아직 남북경협을 본격 추진하기에 여러가지 어려움도 있고 준비가 부족한 부분도 있다. 그럼에도 모든 것을 갖추고 시작하겠다는 입장은 적절치 않은 것으로 보인다.

특히 중국의 대북한 진출이 하루가 다르게 진행되는 시점에서 “감이 무르익어 떨어지기를 기다리자”는 발상은 우리의 국익에 결코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다.

남북협력공사를 둘러싼 논의의 중간에서, 미리 준비하고 상황을 유리하게 만들어가는 것이야말로 정부의 몫이 아니겠는가라는 생각을 하게 된다.